# 2020. 12. 16.(수) 언론보도

OBSNEWS

2020년 12월 15일 (화)
지역

## 문 닫힌지 5년...'개성공단 재개' 촉구 삼보일배

【앵커】
두 달 뒤면 개성공단이 폐쇄된지 5년을 맞습니다.
'기다리면 열리겠지'하는 입주 기업들의 희망이, 이제는 고문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기도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뛰고 있지만, 쉽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차윤경 기자입니다.

【기자】

한 때 밤을 새며 작업이 이뤄지던 공장입니다.

하지만 수십 대의 재봉틀은 흰 천으로 덮인 채 멈췄습니다.

2016년 2월 개성공단 폐쇄 전까지 개성공단 공동브랜드의 속옷을 제작했던 업체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 '열릴 것이다, 열릴 것이다' 하는 그런 희망 고문 속에서 5년이 지나버린 겁니다.]

매출은 70%가 떨어져 많은 직원들을 내보내고도 또다시 구조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다른 기업들의 상황도 비슷합니다.

[약 20% 정도는 거의 휴·폐업 상태로 판단하고 있고요. 60% 정도는 거의 매출 급감에다, 신용등급 급락에다….]

두 달 뒤면 남북 평화와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문이 닫힌 지 꼭 5년.

'재가동'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런 염원을 담은 삼보일배에 나섰습니다.

칼바람 속에 통일대교 남단에서 북단까지 0.9km 구간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강 / 경기도 평화부지사 : 오늘은 개성공단의 첫 제품인 통일냄비가 세상에 나온지 16년이 되는 날입니다. 남과 북의 조속한 개성공단 재개선언을 촉구하고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만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데 이어 다음 수순으로 개성공단을 철거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등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OBS 뉴스 차윤경입니다.

<영상취재: 유병철/ 영상편집: 장상진>

노컷뉴스
2020년 12월 15일 (화)
종합

#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통과, 도민안전·평화 정착 노력 결실"

이재명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CBS노컷뉴스 고무성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기도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경기도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하고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확실하게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이에 경기도는 긴급대응반을 편성하고 도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을 위해 연천·김포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또 대북전단 살포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제화를 지속해서 요청하는 등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태왔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kms@cbs.co.kr

YTN

2020년 12월 15일 (화)
정치

# 접경지역 주민들 "대북전단금지법 적극 환영"

경기도 파주와 강원도 철원 등 접경지역 주민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북전단 금지법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그 자체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지금까지 주민들은 생업을 뒤로한 채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노심초사했다면서, 앞으로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국가가 엄정히 집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인일보

2020년 12월 16일 (수)
12면 경제

# 경기도 숙원 '정부 미군공여지 개발' 이뤄지나

**행안부·국토연 연구용역 18일 완료**

**'文대통령 공약' 구체적 방안 모색**

**道 "국가가 특별한 보상 답할 차례"**

경기도의 숙원이었던 정부 주도 주한미군 공여지 개발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행정안전부와 국토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반환공여구역 조기 활성화 방안 마련 정책 연구용역'이 완료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연구용역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기지역 대선 공약이 '주한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 개발'이었는데 이를 시행하고자 지방정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해당 연구용역은 국내 주한미군 공여지 중 개발할 수 있는 26곳을 대상으로 한다. 경기도가 21곳으로 80% 상당을 차지한다.

도와 도내 시·군은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를 정부 주도로 개발해야 한다고 꾸준히 주장해왔다. 미반환 공여지의 경우 규모 자체가 커 지방정부의 재원으로는 개발이 역부족이란 이유에서다. 동두천의 미반환 주한미군 공여지인 캠프 케이시와 캠프 호비는 각각 1천415만㎡, 1천405만㎡로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20% 상당을 차지한다. 동두천시 측은 "개발 이전에 부지를 매입하고 환경정화를 하는 데만도 비용이 막대하게 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정부시 측도 "아직 반환되지 않은 캠프 레드클라우드와 캠프 스탠리는 개발 가용지가 넓어 정부 주도 개발을 건의했다"고 말했다.

도는 시·군의 요구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청' 단위의 주한미군 공여지 전담기구 설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주한미군 공여지를 반환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환경부, 외교부, 국방부 등 다수의 기관이 참여하는데 이를 일원화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관련해 행정안전부 측은 "(도와 시·군의) 의견을 모두 연구용역에서 검토하고 있다. 제시해준 의견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날 '미군기지 반환, 이제는 국가가 나서 특별한 보상으로 답할 차례입니다'란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이번 합의로 미군 기지의 반환과 개발에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1일 한미 양국 정부는 의정부 캠프 잭슨, 동두천 캠프 모빌 일부, 하남 성남골프장 등 도내 미군기지 3곳을 반환하기로 합의했다.

/남국성기자 nam@kyeongin.com